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이두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mail: ldh24@kict.re.kr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of post-costruc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center

Lee, Du-Heon*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정부에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정 기관으로 지정받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해 주요 업무 중심으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관리기관 설치에 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시행(‘20.05.27.)하였다. 이는 기존 선언적 법 조항에 대해 사후평가 결과를 향후 건설공사에 적극 적용 및 제도의 활성화 등 구체적인 사후평가 업무 및 전문관리기관 지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현행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운용 실태

현행 사후평가는 발주청의 영향력이 큰 용역업체가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의 적절성 및 결과활용 판단 여부도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객관성 및 활용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후평가 수행을 통해 당해 건설공사 또는 차후 건설공사에 활용가능한 많은 개선항목이 도출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주체도 발주청에 부여하고 있어 대부분 일회성으로 활용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사후평가 결과가 건설공사의 성공과 실패여부에 집중되어 활용되다 보니 기획, 설계 및 시공과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대두로 시행을 회피

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건설사업 시행을 통해서 관련 산업, 경제 및 국민생활에의 기여 등 국가 경제 견인차 역할이 있음에도 개별 사업수행 평가와 예타(B/C 등) 결과의 성패 등 부정적 결과에 매몰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신뢰성 높은 과학적 평가가 가능한 기법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나 전통적 평가기법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설공사는 다단계, 다수의 공종이 존재하여, 사후평가를 수행할 때 현행 방식의 대규모 자료 정리 및 분석과 건설공사의 종합적, 분야별 등 특성별 평가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결과를 유사 차기사업에 피드백하는 평가 주체의 인식 미흡, 평가 방법 이해 부족,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이행율은 58%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 및 이행 현황
(‘19.12.31. 기준, 건)

구분	대상사업	완료	미시행
국 토 부	702	494 (70.4%)	208 (26.9%)
타 부 처	156	85 (54.5%)	71 (45.5%)
지 자 체	349	117 (33.5%)	232 (66.5%)
계	1,207	696 (57.7%)	511 (42.3%)

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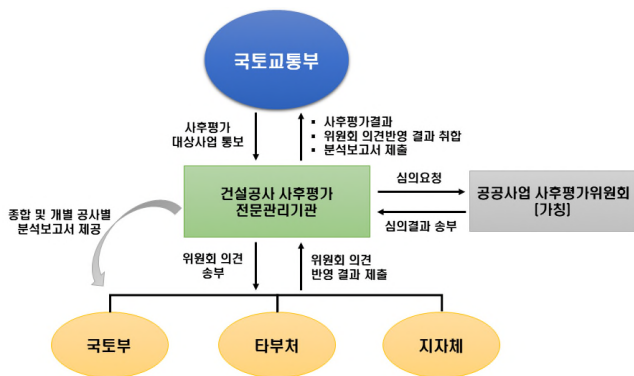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운용실태를 바탕으로 법령에서 위임받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발주청에서 수행한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강화, 오류 최소화 및 적극적 환류를 위해 현행 사후평가 결과의 검증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공공발주청에 의존한 자체 평가, 검증 및 차기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는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취약하므로,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후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현행의 발주청에서 사후평가 제도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변경·추진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사후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의무·반영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다양성·전문성 확보해야 한다.

등 대폭적인 이행을 제고방안 및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최근 경제와 고용이 불안정한 가운데 산업과급효과가 크고 고용증대에 효과적인 엔지니어링산업(전방연쇄효과 1.23, 고용유발계수 11.0명/10억원) 중의 하나이며,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충실한 이행은 고용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고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법정 기관으로 지정받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에서는 사후평가 제도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건설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차후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시 참고자료로써 적극적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관리기관이 설치되기 이전에 평가 결과 확인·점검 등 검증체계 부재, 분석주체 미흡 등으로 나타난 각종 제도 운영의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 중장기적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서 제도운용 실태를 기반으로 제시하여, 발전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위상강화

건설사업 투자 효율성에 대해 성공과 실패 위주의 평가에서 국가, 지역경제·사회 등에 미치고 있는 객관적 기여도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유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관리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기여도 측정 및 발표하는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일회성, 현장성 및 공공성 등 다양한 성격의 건설사업 사후평가를 위한 신뢰성 및 과학적 평가가 가능한 Big-Data 및 AI 활용한 분석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등 건설정책 평가를 위한 Big-Data 분석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존 사후평가보고서(700여건)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후평가 분석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발주청의 평가이행률 제고를 위해 유사 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이행에 따른 조치방안 마련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0년도 주요사업 (과제명: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2015), “건설사업 평가관리 및 활용 고도화 방안 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12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건설공사 사후평가, 쓰임과 확장”, KICT INSIGHT vol.8, 2019.9